61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4.7 보궐선거 이후, 이데올로기와 심성구조

천 정 환
성균관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4.7 보궐선거 이후, 이데올로기와 심성구조

천 정 환
성균관대

01 최악의 보궐선거

다시 위기감과 환멸이 함께 고조되고 있다. 2021년 4월 7일에 열린 서울시장 ·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은 참패했다. 민주당은 전직 시장들의 성비위로 인해 열리게 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들끓는 여론을 무시하고 당헌을 바꿔가면서 서울시장 ·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임했다. 결과는 서울에서는 18%격차, 부산에서는 28% 격차로 '양당 정치' 하에서는 보기 드문 참패였다.

그간 쌓여온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까지 겹쳐 여당은 거의 모든 세대와 계층이 든 '정권 심판'의 회초리를 피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 대패 후에 꾸려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4월 22일 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심을 받들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라는 황당한 글귀를 남겼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했어야 할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의 피해자가 입장문을 내고 "저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선열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현충원에서 제게 사과를 하시나요.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 제발 그만 괴롭히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반발했다.[1)]

이처럼 서울시장 ·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소위 '촛불혁명'이 권력과 구체제에 의해 횡령 · 소멸되고 남은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다시 나타나 한국 민주주의의 전도를 위협하는지 보여주었다. '차선'을 고르는 것이 선거의 '현실'이라지만 차선은 없었다. 거대양당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나 그 후보들의 면면은 퇴행 자체였다. 애초에 민주당이 이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함은 선거본부의 중책을 맡았다가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세 여성 국회의원들이 증거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위성정당들과 벌인 '후보 단일화' 또한 정치 개혁의 필요와 의회정치에 대한 모욕이었다. 상대 진영에서는 이미 심판받고 그야말로 구시대의 상징처럼 된 인물들이 나섰다. MB정권 때 활약하던 그들의 부패 의혹도 다시 제기되었으나 부활하여 당선되었다.

코로나 이후 'K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높아졌다지만, 기실 보궐선거는 한국

1)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이후 민주당 중앙당에 사건 무마, 협박, 개인정보유출 등 2차 가해자인 민주당 인사들의 사과와 당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으나, 김태년 전 당대표 직무대행 명의의 형식적인 회신문만을 받았다는 점을 밝혔다.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윤호중 현충원 사과에 "말뿐인 사과 필요 없다"」『민중의 소리』 2021.4.22. 등 참조

민주주의의 약점과 어두움을 총괄하여 상연하는 한판의 부조리극이었다. 그 한계는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이며, 그 문화정치적 배경은 무엇인가?

02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교대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일부 여당 지지자들은 '아무리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실정을 거듭했다지만 어떻게 반민주 적폐세력이나 토착왜구를 찍을 수 있느냐'는 식으로 한탄했다. '서울시장 선거가 2022년 대선으로 이어지고 야권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협박성 선전 · 선동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낸 것은 소위 '이대남(20대 남자) 현상'과 젠더문제였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정치 구조의 문제가 있고 '이대남'은 단지 민주당의 위선과 실정에 반발하여 이번 선거에서 일시적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했을 뿐 국민의힘이 진짜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라 보아야 한다. 그들은 '스윙보터'에 가깝다.[2)]

근본적인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는 비뚤어지고 왜곡된 양당정치이다. 그것은 촛불의 유산에도 관련이 있으며, 보궐선거에서 많은 유권자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다.

집권당의 전 대표 이해찬은 문재인정권 초기에 '여당 20년 집권론'을 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에 기초한 권력 구도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당은 언제든 다시 집권할 수 있다. 청와대 주변 세력은 망해도 민주당은 버틸 수 있다. 그 민주당의 상대방은 다름 아닌 무능하고 부패한 '적폐' 세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잘못 하면 '보수'가 집권한다. 이같은 순환을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교대라 봐야 한다. 그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과 젠더, 기후 문제는 심화해 간다. 분단과 재벌중심 경제체제 등의 이유 때문에 한국의 '보수'에는 수구 · 극우의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 무능과 시대착오가 다시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다. 평소에는 수구 · 극우와 권력을 나눠먹기(소위 '협치') 하면서 필요할 때 민주 · 진보 코스프레(소위 '적폐 청산')의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백년 정당 민주당'의 본질이자 존재근거다.

그러니까 일부 지지자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같은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고 진보정당이 제1야당이 되는 것을 바란다는 말은 허구에 가깝다. '민주 대 반민주'의 전선이 무화되고 민주당을 '좌파'나 '진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2) 김준일 팩트체커, 「[분석] 페미니즘때문에 민주당이 졌다고?」『뉴스톱』 2021.04.21.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47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페미니스트와 생태주의자들, 그리고 더 많은 분배 정의를 요구하는 '계급주의자'들이 50석 이상쯤 가진 제1야당이 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기존 정치세력이 있을까. '내로남불'은 다른 말이 아니라, 양당이 부자정당 ver1과 부자정당 ver2로서 실질적으로 계급관계 자체에서 구분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4.7 보궐선거에서 거대 양당 서울시장 후보의 (신고) 재산이 각각 55, 56억으로 비슷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소선거구제와 제로섬 대통령선거는 그 제도적 보장이다. 소선거구제와 대선은 양자의 대결이 매번 마치 나라 전체의 명운을 결정짓는 건곤일척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식 극장정치나 정치 스펙터클에 가까울 것이다.

03 '적대적 공존'의 이념과 감정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을 '민주 대 반민주'나 '민주화 세력 대 산업화 세력'의 대결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인식론이 오래되었다.[3)]

이들의 존재방식은 '적대적 공존'으로 보는 입장이 가장 적절한 듯하다. 현재 민주당 주류(특히 친문)의 정체성이 경제, 노동, 복지 정책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다. 그 정체성은 '노무현 트라우마'와 이제 대중 앞에 내놓을 수 없게 된 '민주화운동'의 '훈장' 밖에 없다.[4)]

'민주화 세대'의 주류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세계화'와 '신경제'(IT 벤쳐 열풍)에 뛰어들어 그 주체가 되거나 '산업화 세대'가 닦아놓은 한국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출세했다. 또는 '민주화 세대'는 오늘날의 한국이 있게 한 1990~2000년대의 (그렇게 말해도 된다면) '제2의 산업화'의 주역이기도 한 것이다. 안희정, 이광재, 우상호, 임종석 등 노무현 · 문재인정권 둘 다에 걸친 586 핵심그룹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계층, 생태, 젠더, 지역, 세대 등의 불평등 해소를 통해서만 이뤄질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거의 희박해보인다. 이들 중 일부는 노무현정권 시절 노골적인 친재벌 행보를 걸었다. 그런데 그들의 시계는 '노무현의 시간'(즉 2002년이나 2009년)에 멈춰있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열화(劣化) 복제판'이라는 말도 이런 데서 나왔을 것이다.[5)]

어쨌든 한편으로 노무현정부는 한국의 지배구조 – 검찰, 언론, 서울, 강남, 사학재단 등에 대해 도전하는 자세는 보였다. 그래서 보수 언론과 기득권 세력은 노무현정부와 이념 전쟁에 몰두하고 재임 중에는 탄핵을 기획하고, 퇴임 후에도 정치보복을 감행했다. 결국 이명박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야기된 노무현의 죽음 이후에 형성된 정치적 감정구조와 그에 따른 증환은 치유되지 못하고 더 커지고 변질돼 왔다. '감정'은 지지자들에 의해서는 일면 노무현을 '죽인' 자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일면 노무현에 대한 죄의식과 우상화로

3) 최근에도 『추월의 시대』와 같은 책이 양당의 대결과 한국 정치 세력의 구도를 '민주화 세력 대 산업화 세력'이라 규정한 바 있다.

4) 이 절의 논의는 필자의 「'선진국(?)' 문턱의 '후진' 양당 정치」 『교수신문』, 2021.4.27.(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65346) ; 「낡은 악순환 대체할 새로운 주체를 바라며」 『교수신문』, 2021.05.04.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65854) 축약하고 수정한 것이다.

5) 전성인, 「우리는 지금 쇄신과 개혁을 보고 있는가?」 『경향신문』 2021.04.19

이어졌다. 이런 감정이 단지 마음 속 감정이 아니라, 현실에서 물질성을 가진 정치적 행동과 언어, 그리고 정치적 주체들로 응결 · 재생산되어 왔다.

소위 '촛불혁명'은 원한과 진영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갈 결정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었다. 김어준은 2009년 5월 23일 이후 공식석상에서 검은색 넥타이만 하고 다녔지만 2017년 봄 소위 '촛불혁명'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검은 넥타이를 풀었다 했다. '친노'는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죄의식이나 우상화를 강요하지 않으며, 기억은 제대로 하되 객관적 평가와 함께 과거는 역사 속으로 보내고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야 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의 사람들은 그럴만한 능력은 없었다. 약속했던 개혁의 실패와 함께 오히려 다시 증오의 정치와 진영논리의 악순환으로 들어갔다. 결정적으로 꼬여버린 계기는 알다시피 '조국 사태'였다.

오늘날 진영정치의 악순환은 한편 극렬 지지자들을 전위부대로 삼고, 다른 한편 '민주 대 반민주'라든가 '친일 대 반일' 같은 표상에 기댄다. 진영정치는 일종의 감정정치며 비틀린 도덕정치라서, 다른 진영에 속한 자들과 그들의 당파가 합리성과 공동체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 자체에서 배제하려 한다. 타 진영은 거짓말쟁이며 악의 화신이기에 타협과 대화의 대상이 아닌 절멸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물론 한국 보수의 주요 분파는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 같은 것으로 연명한다. 그들은 '친노' '친문'의 정치를 증오나 공포로 받아들이고, 또다른 일부는 일베처럼 참담하고 비루한 조롱으로 대응해왔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자주 인용되지만, 적대하는 진영이 서로를 닮고 끝없는 악순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양자의 대립이다.

작년 말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국회의사당에서 단식 농성 중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했던 "그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해요?"라는 그 말이야말로 양당 정치의 본질을 찌른 것 아닌가?

문재인정권은 한국의 불평등체제와 분배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면 거의 한 것이 없다. 교육불평등이든, 재벌문제든 부동산문제든, 오히려 기득권과 '산업화 세력'의 이해에 가장 충실히 복무하는 데로 결국 귀착했다. 이것은 혹자들의 진단대로 '선의의 정책'이 실패한 결과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와 민주당의 필연적 결착이나 계급성 때문인가?

04 K와 k의 병치

요컨대 20세기 '모던 프로젝트'로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적 의미는 시효를 다했다. 우리는 이제 심화한 신자유주의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변형시킨 강력한 힘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변화를 더 중시하여 재평가 ·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오래된 버전의 '산업'과 '민주'의 패러다임 시대에 개발된 '선진', '후진'의 위상학, GDP 중심주의, 1987년판 민주주의 등이 더 이상 의미 있는 척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K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척도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파워, (형식적)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분명 큰 성취가 있다. 그러나 화려한 번영의 엷은 외피 아래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나 도저히 '선진'이라 부를 수 없는 다차원의 혐오와 차별, 그리고 지속불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가히 '선진적'이고 '국뽕'할 만한 한국(K)과 부정적이고 사람이 살기 힘든 '헬조선'으로서의 한국(k)은 병치돼 있다. K와 k의 병치는 점점 더 기괴하고도 드라마틱해진다.

'k-지표'는 많지만, 부동의 자살률 1위, 출생률 (뒤에서) 1위만으로도 K와 '국뽕' 전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듯하다. 이 지표들은 상위계층만 제외하고 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힘겹다는 증거로 보인다. 남자건 여자건 아이를 낳기 두려워하고,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부터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3포', '5포'의 벽은 더 높아져 지속불가능성의 토대가 된다. k가부장제의 역설도 중단되지 않아, 50대 이후 남성의 자살률 또한 끔찍하게 높다.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 유병률은 젊은 세대에게서 급격히 상승해왔다.

몇 년 전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는 한국을 방문하고 난 뒤 낸 책 〈죽음의 스펙터클〉에서 한국사회의 특징 네 가지를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라 추론했다. 가해와 자해의 스펙터클이 가족, 학교, 학원, 회사, 미디어 안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를 바꾸고 속도를 멈추거나 늦추어야 자살도 혐오도 줄이지 않을까?

문제는 K와 k가 서로 다르지 않은 한몸이자 필요충분형 관계에 있어서 폭력성과 잔인함이 '추격'과 동시에 '추월'의 동력인 상황은 앞으로 지속될 거라는 데 있다. 예컨대 K팝의 세계적인 선전은, '선진국'에서는 없는 10대들의 피나는 경쟁과 그 노동 · 신체에 대한 연예산업의 정밀한 착취를, K인재들의 뛰어난 학력과 성취는 학교폭력과 학벌체제를 대가로 한 것이다. 이같은 K와 k의 병치는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다. 멈추면 죽을까 싶어 죽도록 고속으로 달려왔고, 와중에 실제로 많이 죽고 죽이기도 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의 지배계급과 통치 엘리트들은 멈출 생각이 없는 듯하다. 그 증거는 지난 4년 간의 일들이다. 최근에도 '촛불혁명' 타령을 해대던 문재인정권은 '혁명'은 커녕 불평등과 지배체제를 더 공고히 해놓았다. 문재인정부식의 변죽만 울리는 정책들로는 자살률 · 출생률 같은 지표조차 의미 있게 나아지게 하기 어렵다. 그것들의 실제 원인인 교육 · 부동산 · 지역 불평등은 결코 고칠 의지나 철학이 없는 듯하다. k속에 속한 이들이 좁은 K로의 관문을 진입하려 엄청나게 사교육비와 부동산 대출금 따위를 치르고, 경쟁과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일이 지배와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에 맞기 때문일 것이다.

05 결론 :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자

그런데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어 버린 4.7 보궐선거 전후의 상황을 야기한 이유는 '운동'과 시민사회의 무능에도 있다. 이미 2020년 가을부터 시민사회는 시민후보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긴 했지만, 아무 의미 있는 준비를 못했다. 시민후보를 추대하자는 흐름도 실제로 나타났지만 명망가 중심의 관성적인 틀을 벗지 못했다. 진보정당 운동과 민중운동 진영이 조국사태, 정의연 사태, 박원순 시장의 죽음 등을 겪으며 얼마나 피폐하고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는 사이에 정의당은 당 대표의 성희롱이라는 참담한 이유로 아예 후보를 내지도 못했다. 다른 진보정당의 후보도 '군소성'을 면하지 못했다. 노동당, 녹색당, 변혁진보당은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상황이 되지 않았다. 전임 시장의 성비위로 인해 생긴 보궐선거였기에 페미니스트를 표방한 젊은 여성 시장 후보는 세 사람이나 나왔다. 그러나 보통의 유권자들은 각각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하고 나선 무소속의 신지예 후보와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를 구분하기도 어려웠다. 2020년 위성정당 참여 문제 등으로 두 페미니스트 진영 간의 대화는 불가능했고, 후보를 아예 내지 못한 정의당의 중재 능력도 없었다. 이는 'K민주주의'와 'K대의제'가 큰 한계에 봉착했다는 진단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진단은 많지만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87년체제'를 종결하고, 노무현 트라우마로부터 야기된 진영정치와 증오의 정치를 종식하고, 확대됨과 동시에 항구화하는 불평등을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데 길이 막혀있다.

정치, 경제, 복지, 젠더, 고용, 평화, 기후변화 등의 면에서 이 나라가 한층 더 진일보한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시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시민사회의 갱신이 필요하다. 사분오열된 진보정당 운동을 다시 모으고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를 재편 · 재건해야만 되지 않을까? 시민사회에도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제7공화국' 운동이라 보인다. '제7공화국'은 대통령중심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의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담을 그릇의 이름이다. 이는 단지 '87년체제'의 정체와 양당 중심 정치구도를 바꾸자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자는 목표나 운동이다. 기후위기, 산업구조 전환 등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아젠다이다. 이를 위한 대중운동이 필요하다.[6] 사실 제7공화국의 문제의식은 이미 촛불항쟁 때 제출되었다. 이를 문재인정부는 개헌 논의로 받아 안았으나, 양당의 기득권은 개헌의 필요와 약속을 무산시키거나 변질시켜 버렸다. 이제 30년 묵은 87년체제가 담아내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한국민주주의를 위한 더 과단성 있는 실천과 아젠다가 필요하다.

6) 장석준, 「제7공화국 운동 방향과 국가 일자리보장제의 효과-종합토론」 2021. 6. 5. 『민주노총 경북TV』 https://youtu.be/4eZ-hAsC0nE)

4.7 보궐선거 이후, 이데올로기와 심성구조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21년 6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9 772508 324001 6
ISSN 2508-3244